

광주·전남 대학 교원 징계-해임 시끌

광주·전남 대학가가 교수와 시간강사 등 일선 교원들의 징계와 해임, 신분 보장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시끄럽다.

광주·전남 6개 대학 교수단체는 15일 오전 8시30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학 운영자의 부당징계와 해임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광주대 해직교수모임, 동신대 교수협의회, 전남도립대 개혁추진위, 청암대 개혁추진위, 조당대 정상화추진위, 한영대 비리척결교수회, 나누리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교원수호교수모임 등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음에도 사학관련법들이 개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아 올해도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 같다"며 "사학 비리의 책임은 정치권이 언론에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묵과했거나 비리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선 대학의 불법이나 비리에 항의하거나 대학 관련자들의 '갑질'에 불복했었다가 그에 따른 보복으로 고발당하거나 해임됐다"며 "교육부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아부, 위선, 부정, 패배라는 명예와 정직, 정의의음을 증시해 왔고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우리를 대학 측은 고립시켜 차단했고 심지어 형사고발, 징계, 해임 등 보복을 서슴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보복성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와 대학 운영자 처벌 ▲부당해직자 즉각 복직 ▲비리고발자 징계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되레 채용 규모 감축과 해고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합법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은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학에 질의한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학별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시민모임은 "대다수 대학이 행정, 재정, 대학 문화 변화 등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 지휘감독 의지나 손익계산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자발적, 능동적 정책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사법은 대학 당국은 물론 노조, 관련 전문가 등 합의를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에서

6개 대학 교수단체, 부당징계-해임 공동규탄 교육시민단체 "강사법 악용, 채용 규모 축소"

는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강사법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내 공식기구 논의 여부 등 관련 질의에 답한 39개 대학 중 강릉원주대, 한국교통대, 금오공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 중'이라고 답했고, 시간강사 채용계획, 강의숫자 변동, 졸업이수 학점 변동 등에 대해서는 강릉원주대, 교원대, 한국교통대, 군산대, 창원대는 "교육부 지침대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으나 대다수 대학은 특별한 논의사항이 없거나 의례적으로 형식적 준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사법은 강사 채용시 임용기간과 임금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1년 미만 임용 제한 3년까지 재임용 보장, 재임용시 소청심사권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올 하반기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채용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교육과목 종류와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불법 취지를 훼손하는 학사행정을 시도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천연소화제 토하(土蠅)잡이 갑자기 수온추가 폭 떨어진 지난 14일 청정지역으로 잘 알려진 강진군 음천면 토하서식지에서 얼음을 깨가며 통통하게 살이 오른 토하(土蠅)를 잡는 농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광주환경단체, 민간공원 2단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광주시의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추진과정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환경단체는 14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과정에서 원칙과 합의 일관성을 상실한 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민간공원 사업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시의 특정 감사와 후속 조치는 원칙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는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익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익 제가를 수용하고

감사를 벌였다"면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모문 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는 제공모 없이 제출된 제안서를 재평가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감사위원회의 제안 심사위원회의 제안서 채택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과 해석을 내놨다"며 "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또는 제삼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기존 우선협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에 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공공성 확보, 공원 훼손 최소화 방안 등을 함께 강구했다"면서 "민·관 거버넌스는 민간공원 10곳의 개발을 조정하고 1600여 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해 제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

택하는 등 협력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시의 원칙없는 행정은 협력 성과를 거두고 사업에 대한 솔한 의혹을 만들었다"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은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공성은 뒷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시에 "기밀문서인 제안서 평가표 유출 경위와 책임자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배경이 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 조직 구성과 민·관 거버넌스에서 결의한 원칙과 사업방향 준수를 촉구했다.

서은홍 기자

중 아동수만명 유통기한 지난 백신 접종 의혹

중국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백신 스캔들이 불거졌다.

14일 BBC,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등은 장수성 진후(金湖)현 당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아동의 수가 145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만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접종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들의 부모 등 수백명이 지난 11일 행정부 청사 인근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한때 경찰이 대거 출동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다.

현지 정부 당국은 책임자 17명을 긴급 체포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태는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최근 장수성 진후현에서 145명이 영아들이 경구용 폴리오 백신(OPV)을 접종하고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 기장은 아이가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뒤 39도 고열이 보름동안 지속됐고, 기침, 구토 등 증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영 언론들은 항의 시위 등에 대해서는 일제히 보도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관리 당국은 SNS에서의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波국민들, 시장 흥기 피습 TV중계에 충격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자선행사 막판에 무대 위에서 한 남성이 파벨 아다모비츠 그단스크 시장을 흥기로 질러 심각한 중태에 빠뜨리는 장면이 TV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전달돼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폴란드 언론들은 이 사건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다모비츠 시장은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자선행사인 크리스마스 자선 대교향악단이 주관한 '천국으로의 빛'이란 아동병원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 막판 흥기를 들고 무대 위로 뛰어오른 남성에게 복부를 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재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의사들이 아다모비츠 시장의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데 성공했으며 소생의 희망이 있지만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다모비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병원 소식통은 아다모비츠 시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자선행사를 중계한 TVN 방송은 27세인 법인이 중도 우파 성향인 시민 강령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외쳤다. 아다모비츠 시장은 과거 시민강령당 소속이었다. 법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인은 자신의 이름이 스테판이라고 외쳤다고 TVN은 덧붙였다.

경찰은 법인이 은행강도 전과자라고 말했다. 마리우스 사르카 경찰 대변인은 법인이 언론사 배지를 달고 사건 현장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자선행사를 주관한 예르지 오비시악은 현 폴란드의 우익 정부가 중요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53살의 아다모비츠 시장은 1998년 이후 계속 그단스크 시장직을 맡아 왔다. 그는 성적 소수자(LGBT)와 약자들을 지원하는 등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美공항서 총기 소지 승객 검문 통과 논란

미국 공항에서 총기를 소지한 승객이 검문에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화된 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통안전국(TSA) 측은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SA는 지난 3일 총을 소지한 한 승객이 애틀랜타 허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검문을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TSA는 "3일 오전 한 승객이 애틀랜타 허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총을 소지한 채 TSA 검문소를 통과했다"며 "우리 직원들이 표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해당 승객이 이용했던 델타항공도 이날 설명을 통해 승객의 신고로 TSA에 신고했다고 뒤늦게 알렸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돼 23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여파로 5만1000여명이 이르는 TSA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고 있다.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주유 4개 공항에서 수백명의 TSA 직원들이 병가를 냈다고 CNN은 전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번없이 129] [고객센터 1577-1000]